

## 한국의 원자력과 매스미디어

이 광 영

과학평론가

한

국에서 원자력이라고 하는 낯선 낱말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41년이 된다. 한국은 55년 12월 13일 한·미 원자력 쌍무 협정을 맺고, 다음해인 56년 3월 9일 문교부 기술교육국에 원자력의 연구 개발 이용을 위한 원자력과를 신설함으로써 원자력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일반인들이 원자력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62년 3월 18일 한국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 TRIGA Mark II(250kW)가 완공되면서부터였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에 관한 내용이 매스미디어에 심심찮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60년대말부터였다.

한국전력공사(당시 한국전력주식회사)가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입지(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를 확정하고, 69년 10월 1일부터 부지 매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는 71년 3월 19일 기공식을 갖고 87개월에 걸친 대역사 끝에 78년 7월 20일 준공식을 가졌다.

신문과 방송은 이를 계기로 원자력 발전 개막을 알리는 특집을 앞다투어 다루기 시작하였다.

당시 국민들의 관심은 원자력이 우리에게 어떤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한 긍정적인 면에 주로 쏠려 있었다. 실제로 당시 한국은 지역 발전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건설 유치 경쟁을 벌이는 일까지 있었다.

여기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한국전력공사는 말할 것 없고 정부가 앞장서서 원자력의 좋은 점만을 대대적으로 홍보(PR)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는 무척 긍정적이었다.

초기 한국의 원자력 발전 사업은 무척 순탄한 길을 걸었다.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 사업이 일반인들로부터 비판을 받기 시작한 것은 80년대초부터였다.

강력한 통제와 성장 위주 정책을 펴온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원자력 발전 사업의 부정적인 시각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과 고장은 물론, 사고 소식이 학계의 보고와 국회의 국정 감사 과정에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79년 3월 28일 미국의 TMI(Three Mile Island)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86년 4월 26일 일어난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한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매스미디어를 통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자 많은 한국 사람들은 현재 한국에서 운전중이고 건설을 계획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가 자칫 잘못 폭발하지 않을까 걱정하기 시작하였다.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가 원자 폭탄 같이 대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의 상당수는 아직도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가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80년대 들어 원자력발전소 주변 해역의 수온 상승과 주변 지역의 방사능 오염 실태가 널리 보도되면서 84년 11월 25일 월성 1호기(중수로)에서 안전 점검원의 실수로 냉각재인 중수가 24톤이나 대량 빠져나간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걱정은 이를 기점으로 한층 커졌다.

더욱이 88년 12월 고리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땅속에서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폐기물이 대량 발견되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 사건이 있는 후 원전 지역 주민은 물론, 공해 추방 운동 단체가 중심이 되어 원자력 발전 반대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공해 추방 단체와 지역 주민이 연합하여 원전 일대에서 나타나는 기형 고기와 기형 가축의 출현은 물론, 무늬야 출산이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 때문이란 주장을 하고 나와, 이들의 주장이 매스미디어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써 원자력의 안전성 문제가 전국민의 관심사로 크게 부각되었다.

80년대 중반부터 80년대말까지는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이 가장 활발히 전개되었던 시기이다. 공해추방운동연합회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20여개 단체가 결성되어, 원전 지역 주민의 방사능 장해 문제로 원전 건설 반대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원전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에 의한 장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하자, 정부는 관련 학자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지에 내려보내 실태 조사에 착수하였다.

결과는 원전 지역의 무늬야 출산은 방사능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과 반핵 단체들은 정부의 조사 결과를 아직도 믿으려 들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반핵 단체들은 제쳐 두고라도 원전 지역 주민들마저 당국의 조사 결과를 믿지 않는 데는 여러 가

지 이유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원자력 발전 사업을 주도한 한국전력공사와 정부 등 관계 당사자들이 그 동안 원자력의 부정적인 측면은 덮어둔 채 좋은 측면만을 너무 강조해 왔다는 점이다.

원자력발전소의 부지 선정과 설계·건설·운영에서 폐기물 처리, 지역 일대의 환경 문제 등 일반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고 협조를 구했어야 할 일들을 등한이 한 것이다. 원자력 관련 당사자들의 설명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좀처럼 돌이키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불신은 이렇게 생겨났다.

그러나 최근엔 원자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설립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물론, 정부 당국도 원자력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PA)를 돕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펼쳐 나가는가 하면 관련 정보를 솔직히 공개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한국 언론이 원자력 발전 사업을 보는 시각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한국 언론이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한 관심을 갖고 비판적 입장에서 있지만, 원자력 발전 사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의 입장에서 석유 대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원자력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당위성이 있기도 하지만, 언론 종사자들이 원자력 발전 사업을 보다 폭넓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에는 원자력 발전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정당이나 극렬한 운동 단체는 없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원자력 발전 사업은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은 10년 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보다 추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언론은 이같은 국민의 욕구에 따라 앞으로 원자력 발전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에 대해 보다 원활하고 올바른 정보의 유통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